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발전

(2017. 5. 18.)

오늘 존경하는 u. c. 엘바인 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고려대학교에서 두 대학의 학문 발전과 교류를 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국을 방문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1. 3.부터 2017. 3.까지 6년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서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고 퇴임한 후, 지난 4. 1.부터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창설 당시에는 한국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서 헌법재판을 시작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헌법재판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받음과 아울러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 가치관에 맞는 독자적인 이론과 제도를 고안하여 한국 특유의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

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권위주의적인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주국가의 건설을 원하였습니다. 그 바램에 따라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하여 1988. 9. 1.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창립 29주년이 됩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 헌법재판의 이론이나 제도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전에도 헌법재판을 한 예가 있지만 불과 4건의 위헌 결정만을 하였을 정도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최고의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에는 헌법이 살아있는 최고규범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 창설 초기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하여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구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위헌적인 법률과 제도를 제거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선거권이 부정되던 일부 재소자나 재외국민에 대하여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에서의 선거권 등을 주지 않은 선거법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등 다수의 선거 관련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대의민주제도의 기본인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화와 음반 등의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 인터넷에 글을 쓰기 위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다수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결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남자쪽 혈통을 중심으로 형성된 호주제에 대한 위헌 결정,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last name)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함으로써 남녀차별적으로 형성된 가족제도를 개선하거나 여성의 인권을 확대하는 결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질서를 부정하며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가시설의 파괴를 선동하는 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수년간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제1의 국가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에 우리 나라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사건입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결이 있으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됩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지난 해 12. 9.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헌법적 장애상태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탄핵사건을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92일 동안 다른 모든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고 오로지 탄핵 심판사건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단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함께 탄핵소추의결권을 가진 국회로부터 대통령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두 측면을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조화시키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사태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큰 혼란이 없이 사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평화적으로 수습되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무척 짧습니다. 그러나 탄핵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헌법재판소가 그 중심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발전시켜 온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세계는 글로벌화와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경제, 문화, 제도 등은 다른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 우선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바인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간의 오늘 같은 학술대회의 개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 대학간의 학술적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두 대학의 학문과 연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는 발판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